
“ 힘에 의한 평화 구현 ”

-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-

2023. 1. 11.



대한민국 국방부
Ministry of National Defense

순 서

I . 추진성과와 평가	2
II 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4
III . 2023년 핵심 추진과제	6
IV 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	18

I. 추진성과와 평가

1 北 핵·미사일 위협 억제·대응태세 강화

□ 美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

- (정책공조)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(SCM, 11. 3.) 공동성명에
강력한 對北억제 메시지 반영 및 美 확장억제 공약 범위 확대*
* 기존 공약 범위(핵·재래식·미사일방어)에 진전된 비핵능력(사이버·우주전자기 등) 추가
- (협력 심화) ▲ 정보공유, ▲ 공동기획, ▲ 공동실행, ▲ 협의체제 등
분야별 美 확장억제 협력 심화에 합의
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(확장억제전략협의체) ↙
* '23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 개정, 한미 확장억제협의체(EDSCG, TTX 등) 정례화 등
Table Top eXercise (토의식연습) ↙
- (이행방안) 美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되게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여
운용하고,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
* 美 레이건항모강습단 전개, 비질런트스톰 훈련 연장, B-1B 전개 및 北 TEL 타격훈련 등

□ 한국형 3축체계 구축

- (체계 재정비) 「핵·WMD 대응체계」 ⇨ 「한국형 3축체계」로 재정립 (5월)
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(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) ↙
* 北 핵·미사일 위협에 집중, Kill Chain (공격)·KAMD (방어)·KMPPR (응징보복)로 구분
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(대량응징보복) ↙
- (정책수립) 「한국형 3축체계」 강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
- (전력보강) 3축체계 관련 소요 결정 및 수정 (29건)
* 소요 결정 18건 (차기 軍 정찰위성, L-SAM II / M-SAM 성능개량 등),
소요 수정 11건 (전자전기 성능 향상, PAC-3 유도탄 수량 확대 등)
- (예산확보) '23년 방위력개선비 31.3% 반영, 국방중기계획*에 중점 할당
* 「'22~'26 국방중기계획」 대비 자원 확대(37.2조→39.5조원) 및 신규사업 추가(77→93개)

2 「국방혁신 4.0」 기본계획 수립

□ 최종상태 (End State)

- 첨단과학기술 초격차를 유지한 가운데 北 핵·미사일 위협 완전 해소
- 혁신적 전력증강 프로세스로 획득 및 운영유지 제한사항 해소
- 군구조 재설계, 합동 쏘영역 지휘통제체계 구축
- AI 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 기반의 부대·전력구조로 개편

□ 추진중점 및 과제

- 국방부·합참·방사청·각 軍 참여 下 기본개념 구상,
5대 중점 및 16개 과제 식별·반영
- 추진과제별 목표·추진개념·세부과업,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

□ 추진로드맵

- 204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, 단기·중기·장기로 단계화
* 3단계 : 단기 (~'27년), 중기 (~'32년), 장기 (~'40년)
- 1단계 (~'27년) 대상기간에 주안을 두고 과제별 추진계획 구체화

3 2022년 방산수출 성과

□ 수출 실적

- 최근 5년 수출액 평균의 5배 수준인 총 173억 불 달성
-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 기록
* 13만 개의 일자리, 46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창출

□ 수출 대상권역 확대

-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로 방산수출 대상권역을
중동·아시아 위주에서 유럽지역으로 확장하는 계기 마련

Ⅱ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국방환경 평가

□ 세계 정세

- 美中 전략적 경쟁 심화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정치·안보·경제의 中心으로 부상
-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, 대만해협 긴장 등 전통적 안보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, 감염병·사이버위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지속 증대

□ 지역 정세

- 민주주의 對 권위주의 진영간 대립구도 형성, 역내 국가들에 대한 양자택일 압박이 지속 증가
- 북한의 핵·WMD 능력 고도화 및 남중국해 긴장 고조로 인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 심화 예상

□ 북한 정세

- ‘핵무력 완성’을 목표로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무기개발 노력을 지속
- 한미동맹·우리 軍의 對北억제력 강화를 빌미로 도발 강도를 높이며 우리 대비태세를 시험, 혼란 조성(무인기 침투, 사이버 공격, 군사합의 위반 등)
-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, 접적지역에서의 전술적 도발 가능성 증가(사이버전, 심리전, 여론전 등 적극 활용)

□ 국내 정세

-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과 국가재정여건의 어려움 심화, 국민들은 강군 육성과 병영환경 개선 등을 지속 요구
-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발전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선도
- 산업화·도시화·정보화 등으로 인해 국가·국방 차원의 공익과 개인·지역사회의 권익간 충돌 경향 심화

※ 국방환경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기초로 '23년 국방정책 추진방향 설정

2 2023년 국방정책 추진방향

전략적 요구

- 北 핵 위협 대비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보장하는 가운데,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능력 및 태세 구축 필요
* 北의 저비용 비대칭 도발에 대한 실효적 대비태세 강화도 병행 추진
- 병역자원 급감, 국방재원 불확실성 등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을 최대 활용한 국방분야 전반의 도약적 혁신 요구
-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, 양국간 국방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도약적으로 확대·심화 필요
- 국익 창출과 우호적 국제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, 우방국과의 연대 강화 필요
- 장병 사기·복지 증진은 강군 육성의 핵심요소임을 명확히 인식, 장병 의식주, 의료체계, 초급간부 복무여건 등에 대한 다각적 개선노력 요구
- 장병들의 개인 욕구를 고려한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하고, 지역 주민과 軍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혁신노력 필요



‘튼튼한 국방, 과학기술 강군’ 건설로 ‘힘에 의한 평화’ 구현

혁신과 자강

- ① 한국형 3축체계 능력·태세 강화
- ② 우주·사이버·전자기 등 新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
- ③ AI 기반 유·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
- ④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

동맹과 연대

- ① 美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
- ② 한미 연합연습·훈련 강화
- ③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
- ④ 방산수출 확대 견인

복지와 상생

- ① 장병 의식주 개선
- ② 軍 의료체계 개선
- ③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
- ④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

Ⅲ. 2023년 핵심 추진과제

혁신과 자강

① 한국형 3축체계 능력·태세 강화

고도화된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軍의 능력·태세를 공격 / 방어 / 응정보복으로 구분하여 획기적으로 강화

□ Kill Chain

○ (능력) 북한 핵심표적 감시·타격능력 확보 가속화

- (탐지) 핵심표적 징후감시 역량 강화

• 독자적 軍 정찰위성 최초 발사

* 핵심표적 감시주기 및 위성 재방문주기 단축 가속화

• 신규 소요결정* 및 AI 기반의 최첨단 감시·정찰 핵심기술** 확보

* 위성통신체계, 다목적실용위성 등

** 실시간 다차원 영상판독·융합, 위성영상 시한성 표적 탐지 기술 등

- (타격) 고정·이동·궤도표적 정밀타격능력 강화

Korean Tactical Surface-to-Surface Missile

• 전술지대지미사일(KTSSM),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·장사정 미사일 확충

* 핵심·이동표적 타격수량 확대, 비물리적 타격수단 확보 등

• 신규 소요결정* 및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** 확보

* 성능이 향상된 전술지대지미사일(KTSSM) 등

**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기술 및 형상 설계, 고성능 대형 수중발사장치 등

○ (태세) 운용개념·계획 발전, 연습·훈련 등을 통한 실행력 제고

- 계획 발전 및 연합·합동 미사일 타격훈련 강화

- 미사일 '발사 前 단계' 교란·파괴 개념 발전

□ KAMD

○ (능력) 「복합다층방어체계」 확보 가속화

- (탐지) 북한 쏘지역 미사일 발사 조기 탐지 및 연동능력 강화

• 지상레이더 확충 및 우주기반 조기경보위성 탐지능력 강화

Korea Theater Missile Operation Cell

• 탄도탄작전통제소 (KTMO Cell) 성능개량으로 다수체계 연동능력 향상

- (요격) 미사일 요격자산 확충 및 장사정포 요격능력 개발 가속화

• PAC-3 유도탄 수량 확대, M-SAM 개량형 (Block-II) 포대 전력화, L-SAM 연구개발 가속화 등

• 신규 요격자산 소요결정 및 핵심기술* 확보

* 장사정포요격체계 탐색개발, L-SAM-II · M-SAM 개량형 (Block-III) 핵심기술 개발 등

○ (태세) 네트워크 기반 작전체계 발전 및 방호·방어태세 강화

- L-SAM·M-SAM 통합 운용체계 발전

- 민방공 경보 및 방호체계 점검, 정례적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시행

□ KMPR

○ (능력) 북한 쏘지역 전쟁지도부·핵심시설 파괴능력 고도화

- (미사일)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수량 확대

- (특수전) 핵심시설 은밀침투 능력* 확보 및 특임여단 전력보강(첨단 개인장비)

* C-130H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등

○ (태세)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운용계획·체계 발전

- 유사시 대량응징보복을 위한 계획 발전

- 국가 차원의 고위력 미사일 운용체계 강화

② 우주·사이버·전자기 등 新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

우주·사이버·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기반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·전략을 발전

□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가속화

- 「국방우주전략」과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개념·체계* 발전
 - * 합동성에 기반한 지휘·통제 아키텍처 정립, 합동우주작전 수행부대 임무 구체화
- AI 등 첨단과학기술*이 적용된 우주전력 확충
 - * 위성영상 초해상도 기술, 위성간 초연결 네트워크 등
- 범정부 협업을 통한 법·제도 개선 및 한미·국제 우주협력 확대
 - (법·제도) 「우주개발진흥법」 개정, 전시 국가·민간 우주자산 軍 통합 활용 등
 - (우주협력) 한미 우주 토의식연습 (TTX), 국제우주연습·훈련 참여 등

□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전력 확충

- 사이버작전 여건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확충
 - * 軍의 사이버 분야 역할 규정을 위한 「통합방위법」 개정 (후반기) 등
- 사이버 정책·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
 - * 「국방사이버안보전략서」 발간 (6월),
공세적·능동적 사이버작전을 위한 작전계획·예규 구체화 (후반기)
- 지능화·고도화된 사이버 전력 구축
 - * 「사이버전장관리체계」 탐색개발, 사이버 핵심기술 R&D 추진 ('23~'29) 등
- 사이버위협 연합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한미 양자훈련 추진 (TTX/FTX)

□ 국방 전자기능력 발전을 위한 기반체계 마련

-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확충
 - * 효율적 작전수행을 위한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조직 보강(상반기) 및 대외협력 강화
- 전자기 정책·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
 - * 「합동군사전략서」에 전자기 작전개념 반영(상반기), 「국방전자기스펙트럼전략서」 발간(12월)
-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을 위한 전력 확보
 - * 소프트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 등 첨단기술 기반 전자기전 수단 및 전장관리시스템 단계적 확보 ('23~'29)

③ AI 기반 유·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

전쟁양상 변화에 따라 전투효율성 제고 및 인명 손실 최소화를 위해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유·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

* 원격통제형 중심 ⇨ 반자율형 시범 ⇨ 반자율형 확산 / 자율형 전환

□ 「반자율형 체계」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한 시범부대 운용

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y Revolution technology

○ (육군) 제25사단 70여단 (Army TIGER 여단, 지상전투)

* 주요체계 : 정찰·공격형 드론, 다목적무인차량 등

○ (해군) 제5전단 (기뢰제거작전)

* 주요체계 : 수중자율기뢰탐색체, 기뢰제거처리기 등

○ (공군) 제20전투비행단 (무인편대기 운용)

* 주요체계 : 무인편대기 시범기 개발 및 비행기술시범 등

○ (해병대) 제1사단 (상륙작전)

* 주요체계 : 유·무인상륙장갑차, 소총사격드론 등

□ 유·무인 복합체계 조기 전환을 위한 민·관·군 협력 강화

○ 무인체계 운용성 보장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

- (상호운용성) 무인체계 공통 플랫폼과 모듈화장비 개발
- (주파수) 주파수 효율화 및 혼·간섭 저감기술 개발
- (보안) 국방 암호장비 표준화 개념 연구
- (통합관제) 드론 통합관제 및 공역체계 구축방안 정립
- (지능화) 지능화된 국방운영과 전력 도입을 선도할 「국방AI센터」 창설

○ 범부처 협력을 통한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

- 민군 드론·로봇 실증시험장 구축 착수 및 시범 운용

Advanced Air Mobility

- AAM (차세대 항공모빌리티)·무인체계 기술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

○ 국방AI 및 무인체계 연구 붐 조성을 위한 경연대회 활성화

※ 유·무인 복합체계 신속전력화 추진과 병행하여 장병 정신전력 강화, 예비전력 정예화 등 현용 유·무형 전투력 강화노력도 소홀함 없이 추진

④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

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과 우리의 대응간 식별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軍의 압도적 대응능력과 태세를 구축

□ 現 작전수행체계 진단

- 北 소형무인기는 사전 침투징후 식별이 제한,
국지방공레이더 외 기타 감시자산으로 탐지 곤란
- 변칙적 비행속도·고도·비행경로로 인해 我 대공화기·공군기·
육군헬기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
- 크기가 작아 타격이 제한, 민간피해 우려로 인구 밀집지역에서 교전 제한

□ 현존전력 下 작전수행체계 보완

- 무인기 공중침투대비 작전개념 재정립
 - (탐지·식별) 한미 감시·정찰자산 등 활용, 北 무인기 조기탐지·식별
 - (추적·차단) 항적추적 및 공중 다중차단
 - (격추) 물리적·비물리적 수단 선별 운용, 적시·효과적 타격
- 가용 탐지·추적·타격 자산 배치 및 운용 조정
- 합참·작전사 통제 下 교육훈련체계 보완
 - * ▲ 쏘제대 참여 합동방공훈련 시행, ▲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절차 점검 등
- 우리 무인기 등 감시·정찰자산 공세적 운용

□ 北 무인기 대응능력 증강

- 對무인기 전력 조기 전력화
 -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·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
 - 對드론체계, 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 조기 확보
 - 탐지 및 타격체계 간 실시간 표적정보 공유 및 통합운용체계 구축
- 탐지가 어려운 소형무인기의 연내 대량생산체계 구축
- 「합동 드론사령부」 창설
 - * 감시정찰,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 가능한 부대로 조기 창설
-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 가속화
 - * 스텔스 무인기, '드론 킬러 드론' 등

① 美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

동맹이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·구체적 이행방안을 발전

□ 확장억제 분야별 한미공조 강화

- (정보공유) 북한 핵·미사일, 역내 美 핵전력 배치·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 확대
- (공동기획) 북한의 모든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「한미맞춤형 억제전략 (TDS)」 개정 및 작전계획 발전
Tailored Deterrence Strategy
- (공동실행)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제8차 「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(DSC TTX)」 개최
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(억제전략위원회)
- (협의체계) 美 핵사용 의사결정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 협의체 활성화 등 한미 위기협의시스템 발전
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
* 국방장관회담, 확장억제전략협의체 (EDSCG), 억제전략위원회 (DSC)

□ 美 전략자산 전개 확대 및 협의 활성화

- (전개 확대) 美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 발휘를 위해 한반도 또는 인근 美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 확대
KIDD Ad hoc Consultation Mechanism
- (협의체계) 美 전략자산 전개 협의체계 (KCM) 활성화를 통해 北 핵·미사일 도발시 적시적인 고위급 정책협의 보장

② 한미 연합연습·훈련 강화

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전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 연합연습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심화·확대

□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 심화·발전

- 한미 연합연습·훈련 시행방법 개선을 통한 실전성 제고
 - 전반기 연합연습(FS)을 1·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 시행
-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, 북핵 위협 고도화 등을 반영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 적용
 - 북한 예비전력 및 민간요소에 의한 실질적 위협 반영
 - 변화되는 北 위협 양상을 반영한 핵사용 억제·대응 연습 강화

□ 정부·군사연습 통합시행을 통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 숙달(후반기 UFS)

- 軍 - 중앙·지방정부 -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 적용 및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전적 상황 조성
 - * 국제분쟁 양상 및 인프라 발전 등을 고려한 원전 급조폭발물 발견, 반도체공장 화재, 금융 전산망 마비 등
- 민·관·군·경 통합대응이 요구되는 다양한 실제훈련(FTX) 병행 시행
 - * 주요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상황을 적용한 통합대응훈련 시행

□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 활성화

-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
 - * 전반기 FS 연습과 연계하여 쌍룡 연합상륙훈련(사단급 규모) 등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「독수리 훈련(Foal Eagle)」 수준으로 집중 시행
- 한미동맹 70주년, 건군 75주년 계기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시행

③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

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, 다양한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

□ 「미래동맹 공동선언문」 발전

- 한미 군사동맹이 이루어온 지난 7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한미 공동으로 발전
 - *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(SCM)에서 승인·발표 추진

□ 韓·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

- 한미 공동주최 ‘韓·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’ 개최 추진
-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과의 연대를 동시에 강화
- ‘北 핵·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’와 ‘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’ 등 우리정부 통일·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·협력 결집

□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

-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
-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등 우리 軍과 동맹의 압도적인 억제·대응능력을 현시

□ 연합합동화력시범

- 주한미군 및 유·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 참가, 역대급 규모로 한미 연합전력의 막강한 화력 시현
- 동맹의 압도적인 對北 억제력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집중 홍보

④ 방산수출 확대 견인

방위산업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도하고, 동시에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강화

□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

- 무기체계 개조·개발지원 등을 위한 수출지원 예산 증액
* '22년 638억 원 → '23년 813억 원
 - '방위산업발전협의회' 확대 운영으로 방산수출 현안 협의, 제도 개선, 他 산업 협력사안 발굴 강화
 - 권역별 수출전략 수립과 지역별 잠재 수출국 및 수출품목 발굴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
 - 각종 방산전시회 계기 우리 무기체계 홍보를 강화하고,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적극 추진
- ※ 단순 판매에 매몰되지 말고 무기체계 공동개발, 원전 등 경제안보와 패키지 협력 등 다각적 접근 강구

□ 추가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세일즈 강화

- 수주 완료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행으로 구매국 만족도 제고
- 구매국 대상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, 교육·훈련 지원,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化하여 지원

□ 도전적 국방 R&D 환경 조성

- '27년까지 R&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% 이상으로 확대*
* '22년 8.85%(4.8조 원) → '23년 8.9%(5.1조 원) → '27년 10% 이상(7조 원 이상)
- 미래 핵심기술*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('22년 1조 원 → '23년 1.4조 원 → '27년 1.5조 원)를 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 가속화
* 8대 게임체인저 분야 : 인공지능, 극초음속, 합성생물학, 고에너지, 미래통신/사이버, 우주, 무인·자율, 양자물리 등

※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·관·군의 역량과 노력 집중

① 장병 기대수준에 부합한 의식주 개선

장병 사기·복지 증진은 강군 육성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MZ 세대 기대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의식주를 획기적으로 개선

□ 안전한 장구류 및 쾌적한 피복 보급으로 전투력 발휘여건 보장

- (안전한 장구)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투장구류를 개발·보급
 - * 방탄기능과 활동성이 강화된 방탄헬멧 보급('23년~) 및 방탄복 개발(~'24년)
- (쾌적한 피복) 선호도와 트렌드가 반영된 기능성 피복 보급
 - * 브랜드 신발, 기능성 팬티 및 언더셔츠 등

□ 장병 선호 충족에 최적화된 '급식' 인프라 구축

- (선택형 급식체계) 선호하는 메뉴와 식재료를 제대별 영양사가 선정
- (급식 질) 민간조리원 증원* 및 조리인력 처우개선으로 급식의 맛 향상
 - * 민간조리원 : '21년 2,278명 → '22년 3,188명(+910명) → '23년 3,305명(+117명)
- (조리 및 취식여건) 현대화된 조리기구 확대보급 및 병영식당 개선
 - * 컨베이어 토스트기, 밀폐형·전기식 튀김기 등 지원('23년, 304억 원)
 - * 편의성이 보장된 병영식당 환경개선(297개소 / '23년, 2,119억 원)
- (전투식량)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도록 전투식량 획기적 개선
 - * 기존 11개 식단을 34개 식단으로 다양화(~'23년), '24년부터 전력화

□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~4인실 구조로 개선

- (생활공간) 독립된 생활공간 보장을 위해 생활실 면적을 확대하고, 생활실 내 화장실·샤워실을 설비
 - * (현행 9인실 기준) 1인당 6.3m² → (4인실 기준) 1인당 10.78m²로 확대
- (숙면여건) 침구류를 이불류로 전면 교체, 입영 前 환경 수준으로 개선
 - * 육군·해병대 침구류 상용이불류로 교체(~'23년, 32만 세트 보급)

② 軍 의료체계 개선

복무 중인 장병에게 軍 특성이 반영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, 전역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시스템 구축

□ 원격진료, AI 진단시스템 확대를 통한 빈틈없는 의료체계 구축

-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 성능개선 및 확대
 - * 격오지 원격진료소 확대, 함정 원격의료체계 순차 도입
- AI 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시스템 확대 적용
 - * 판독대상 질환 및 부대 확대 : 폐질환 등 6종/33개 부대 → 골절 등 9종/88개 부대
-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지원 강화
 - * 軍 병원 무상진료 기간 연장 (6개월 → 1년), 각 軍 및 의무사령부 기록물 관리 연동체계 및 인터넷 기반 의무기록 발급체계 구축

□ 국군외상센터 확대·발전을 통한 최고 수준의 외상진료 능력 확보

- 환자군 확대 (민간 외상환자) 를 통해 외상분야 진료역량 강화
- 외상분야 전문성·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병원과의 협력사업 추진

□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의무후송전용헬기 추가 운영

- 통합관제시스템 12개 플랫폼 (헬기 위치추적, 응급실 현황 등) 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, 후송거리·시간·수단·병원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
- 서북도서 및 영동지역 의무후송전용헬기 거점 추가 운영
 - * 후송시간 50% 이상 단축 (백령도 → 인천 기준) : ('22년) 2H 10' → ('27년) 1H

□ 숙련된 軍 의료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

- 장기군의관
 - 의무복무기간 연장 (19년 → 23년) 으로 숙련된 장기군의관 확보 안정화
 - 진료업무보조비 인상 및 장기복무연장 지원수당 신설, 전임의 직무연수 확대
- 간호장교
 - 부족 간호인력 확보 위해 총 538명의 간호장교 증원 ('22~'30년 / 9년간)
 - 일부 주특기(중환자·응급) 교육을 민간병원 중환자실·응급실 직무연수로 대체

③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

④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

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軍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□ 추진배경

- 소규모로 산재된 주둔지는 예산투자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저하, 지역개발 저해로 인한 민군갈등 야기, 군인가족의 정주여건 악화 초래
- 인구급감 환경에 대응하는 민군상생 노력 요구 증가
 -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는 군부대 유치 경쟁 또는 부대 존치 요구 증가
 -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감소로 권역단위 군부대 통합운영 필요성 대두
- ※ 하나의 완결된 도시 형태의 복합타운 조성으로 민군상생 방안 모색

□ 민군상생 복합타운 추진방향

- 산재된 군사시설을 '전략적 요충지'에 통합하여 효율적 군사활동을 지원하고, 군인 및 군인가족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복합타운을 작전·훈련·행정시설을 위한 '군사구역'과 주거·복지·문화·학교시설을 위한 개방형 '민군상생구역'으로 구분
 - (군사구역) 보안이 필요한 시설들의 통합 배치를 통해 부대운영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,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
 - (민군상생구역) 부대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시설의 질적 향상 및 다양성 확보 도모
- 민군상생구역은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지 선정 및 도시관리계획과 연계

□ 추진계획

- 대상부대, 시설 소요 및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 규모·지역 판단('23년)
-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와 기부대양여 사업절차 정비 후 '24년부터 본 사업 추진

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

1 방산분야 규제 완화

□ 방위사업 특수성 반영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

- 첨단무기체계 연구 촉진을 위해 ▲ 성실수행 인정시 지체상금 감면, ▲ 최저가가 아닌 품질·성능을 고려한 낙찰자 결정 등 계약제도 개선

* 방위사업 관련 법령 정비 추진

□ 도전적 국방 R&D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

- 국방 R&D 참여기업 등의 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탈피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

* 국가 R&D와 유사하게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불량한 경우만 제재처분 부과
(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개정 추진)

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·완화

□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법률 개정

- 접적·非접적지역, 항공작전기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, 보호구역 해제·완화와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

*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 소요 최소화를 위해
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개정 추진

3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

□ 입대 前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

- 「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」 설치·운영을 통한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
 - (자기개발 기반 마련) 전공·자격을 고려한 軍 특기 추천 등 미래설계 지원
 - * 서비스 인원 확대 : ('22년) 30,000명 (6개 센터) → ('23년) 39,500명 (8개 센터)
 - (취업지원) 취업정보 주기적 제공 등 전역자 사회진출 지원
 - * 고용부·중기부·보훈처 등 유관기관 협업, 취업컨설팅, 취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
-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」 확대
 - * ('22년) 6개소 → ('23년) 8개소 (+2) → ('24년) 10개소 (+2) → ('25년) 12개소 (+2)

□ 미래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

-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소요 충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 확대
 - * 유관부처 합동 '제도발전 T/F' 구성 下 세부시행계획(안) 마련(상반기)
 - (확대규모) 現 25명(학사)에서 50명 수준(학사 25, 석사 25)으로 확대
 - (활용직위)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수요
 - (예산반영) 장학금 지급 등 소요예산은 과기부 예산에 반영 추진
-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요원(보충역) 제도 개선
 - '24년 이후 인원배정은 '23년 규모(2,300명)를 유지, 석·박사 요원간 인원 조정(석사 1,300명 → 1,200명, 박사 1,000명 → 1,100명)
 - * 조정된 박사 배정인원(100명)은 '반도체 분야'로만 배정·선발

□ 軍 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

- (원격강좌 학점취득) ('22년) 176개 대학 → ('23년) 179개 대학 (+3)
 - * 재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 취득(학기당 6학점 이내)
- (군복무경험 학점인정) ('22년) 76개 대학 → ('23년) 82개 대학 (+6)
 - * 軍 교육·훈련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(과목별 1~3학점)

□ 軍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

- 생산적 軍 복무를 위한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 활성화
 - * ▲금액: 연간 개인별 12만 원(본인부담 20%), ▲분야: 학습비용, 시험응시료, 운동용품 등
- 장병 자격취득 여건 보장을 위한 軍내 검정종목 확대
 - (국가기술자격) ('22년) 건축기능사 등 83개 종목 → ('23년) 85개 종목 (+2)
 - (국방분야 국가자격) ('22년) 헬기정비사 등 12개 종목 → ('23년) 14개 종목 (+2)

□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* 창업동아리 편성·지도 → 멘토링 → 경진대회 → 사후관리

- 軍내 창업경진대회 포상규모 확대*로 창업문화 확산 및 붐 조성
 - * ('22년) 총 4,100만 원 → ('23년) 총 5,000만 원 → ('24년) 총 1억 원
- 장병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개발·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
 - * (창업인식개선교육) ('22년) 기본교육 → ('23년) 기본교육 + 심화과정(아이디어 고도화, 기술출원 등)
 - * (창업멘토링) ('22년) 사업계획서 작성 위주 → ('23년)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전략 등 포함
- 전역 후 실제 창업 및 상품화로 이어지도록 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
 - ▲ 軍 출신 창업 성공 사례자 1:1 멘토링 실시, ▲ 중기부 등 예비 창업패키지(창업진흥원)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까지 적극 개선

□ 전역예정 장병 전직 지원

- 중·단기복무자 등 전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
 - (중기복무자)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 확대 추진
 - * (현행) 1~3개월 → (개선) 3~5개월(자격증 취득기간 등 고려 2개월 연장)
 - (단기복무자) 재임용 초급간부의 전직지원기간 부여시 과거 군경력 가산
 - * (현행) 5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가산 → (개선)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가산
- 청년 장병의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
 - 관계기관·경제단체 MOU 체결/협업, 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
 - 기업현장연수(인턴십) 매칭 활성화, 한국폴리텍대학 협업 下 기술교육분야 확대